“선거법 위반될라” 몸사리는 행정에 시민들 ‘부글’

매년 해온 주남마을 축제
보조금 못받아 주민들 발동동
북구청 앞 세월호 추모행사도
지원 안돼 우여곡절 끝 개최
“선관위 잣대 너무 엄격” 불만

광주 동구 지원2동 주남마을은 매년 5월이면 특별한 마을축제를 열어왔다. 2014년 5월 처음 개최했으니 올해로 9회째다. 축제 이름은 ‘기역이 니은이’. 1980년 5·18 당시 전두환계엄군에 의한 학살을 겪었던 마을은 아픔과 상처를 뛰어넘어 치유와 평화를 지향하자는 뜻에서 매년 축제를 열어왔다. 축제 개최 배경에 범상치 않은 사연이 녹아있는 탓에 마을 축제인데도 전국적 명성을 얻었고, 마을주민은 물론 시민사회의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그런데 올 봄에는 주남마을 ‘기역이 니은이 축제’가 제대로 개최되지 못할 상황에 처했었다.

축제 정상 개최가 불투명하다고 밝힌 주민들은 “6·1 지방선거가 영향을 줬다”고 전했다. 매년 100만~150만원의 광주시 보조금 지원을 받아 ‘관(官)에서도 인정하는 축제’로 번듯하게 축제를 치러왔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광주시가 보조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일이 헝클어졌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무래도 걱정이 돼 광주시선관위에 문의했는데, 주남마을 축제 지원 사업비가 배정된 ‘광주시 인권마을 사업’ 자체가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선관위 유권해석 결과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이 선거구민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이다.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후보자 측이 유권자에 금품·향응을 주거나 베푸는 것이 주로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법령이나 자치구 지침 혹은 조례 등에 근거해야 하는데 해당 사업은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했다.

주남마을 주민들은 광주시와 광주시선관위의 결정과 설명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다.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해오던 마을 축제이고 4년 전 지방선거(6·13지방선거)때는 문제가 안됐는데, 올해만 왜 문제가 되느냐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5·18기념재단 등 5·18 관련 단체들은 “선관위 결정이 앞뒤가 맞지 않다” “인권도시를 표방해온 광주시가 주남마을 축제 예산지원 근거를 조례나 지침으로 규정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오다 벌어진 일”이라며 광주시와 광주시선관위를 싸잡아 비판했다.

주남마을 한 주민은 “주민들이 직접 담근 고추장과 된장을 내다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가 사업비를 급히 지원키로 하면서 어떻게든 축제는 치르게 될 것 같다”며 “지방선거라고 하지만 너무 엄격한 잣대를 세운게 아니냐”며 혀를 찼다.

비슷한 사연은 북구에서도 있었다. 지난 15일 광주 북구청사 앞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마을 행사에서 선관위의 판단으로 인해 행사가 진행되지 못할 뻔 했다.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이 북구청사 앞 광장에서 행사를 준비하며 장소 사용 승낙과 의자·테이블·전기공급을 요청했는데, 북구가 청사 앞 광장 사용만 승인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시민상주모임 측이 수소문 끝에 이동식 자가발전기를 급히 빌려오고, 의자와 테이블을 직접 가져오거나 빌려온 끝에 행사를 겨우 치를 수 있었다고 한다.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 관계자는 “선거법을 떠나 모든 법은 지켜야 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면서도 “그런데 매년 진행되는 추모 행사조차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처사가 아닌지 선관위나 지자체가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노란색 지붕’ 유두석 군수 검찰, 경찰에 재수사 요청

검찰이 계약직 공무원 집 지붕을 노란색으로 칠하라고 강요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유두석 장성군수를 혐의 없다고 판단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21일 장성경찰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이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신들에게 사건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군수는 2020년 계약직 공무원 A씨의 주택 지붕과 처마 등을 지역 상징색인 노란색으로 칠하도록 강요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피소됐다.

경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혐의가 없다고 최근 판단했다.

경찰은 허위공문서작성 교사에 대해 무혐의를 내린 근거와 관련, 검찰측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도입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검찰은 경찰이 종결한 사건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북한군 개입설’ 허위사실 어디서 비롯됐나

이동욱 5·18조사위원 “2002년 의견광고로 피소…복수심에 퍼트려”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보수언론 출신의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은 군 출신의 극우인사 지만원의 복수심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을 내놨다.

21일 5·18기념재단에서 열린 ‘5·18허위조작정보분석 집담회’에서 월간조선 기자 출신의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이동욱 비상임위원은 ‘Ghost Breeders, 유령을 키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이 위원은 글에서 “지만원이 2002년 8월 서울 소재 신문사에 냈던 의견광고가 말썽이 되면서 실체 없는 5·18 북한군(광수) 투입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광고 게재 이후 5·18 관련 단체가 지만원을 고소했고,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만원이 복수심에 사로잡혀 ‘5·18 북한군 투입설’을 퍼트리기 시작한 게 일명 ‘광수’ 논란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 위원은 이어 “지만원은 자신을 고소한 5·18단체에 대한 복수심에 지지자를 모으고 증언과 증거들을 조작했고, 2015년 5월 5일 직접 펴낸 책에서 (5·18 당시 광주 시민을 가리켜) 북한군 특수부대원 일명 ‘광수’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사건이 커졌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은 특히 “일명 광수 문제가 지만원과 함께 증언을 조작한 탈북자들이 관심을 끌기 위한 허위 제보라는 점을 국가 정보기관이 알고 있었지만 묵인했다. 이게 더 큰 문제”라고도 했다. 국정원은 실제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번의 자체 조사에서 북한군 개입설은 허위사실이며, 국정원이 과거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정원의 침묵과 지만원을 비롯한 일부 극우 세력이 인터넷 등을 통해 북한군 투입설이라는 허위사실을 퍼트렸고, 지속해서 관련 주장을 담은 책을 펴내면서 ‘북한군 광주 투입’이라는 유령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됐다는 게 이 위원의 이야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1일 오후 광주 서구 5·18 기념재단에서 열린 5·18허위조작정보분석 집담회가 열렸다. 발표자로 나선 이동욱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토석 채취 대가 금품수수 혐의 감사원, 자치단체장 수사 요청

전남지역 모 자치단체장이 특정 업체에 토석채취를 부당하게 허가해주고 이익을 챙겼다는 감사원 보고서가 나왔다.

감사원은 21일 ‘2021년도 공직비리 기동감찰’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전남지역 A군수를 금품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A군수는 지난 2016년 B기업이 소유한 산지에 대해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토석채취를 허가해 줬다. ‘지정 목적 달성 및 토석채취 허가 신청’이 근거인데, 인근 저수지 저수량 영향을 살피는 등 ‘지정 목적 달성’을 검토하지도 않았고, 애초 ‘사업용’ 토석채취는 지정 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원은 또 A군수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 5만 4000주를 B기업에 평가가치보다 10배 비싸게 팔아넘겨 5억 4000만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해당 산지는 지난 1994~2014년 A군수 소유였으며, 2014년 동서 명의로 바꿔 B기업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수는 “단독·졸속으로 토석채취를 허가해 줬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산림청으로부터 산림보호구역 해제 허가를 받고, 군청 산지 관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내리는 등 절차를 밟았다”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조종태 광주고검장 “검수완박 반대”

광주고검이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벼르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법안 통과 반대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조종태 광주고검장은 21일 오전 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둘러싼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검사장은 해당 법안들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부르면서 “(해당 법안은) 검찰청을 해체하거나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자는 것으로 헌법정신을 훼손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제12조, 제16조에서 수사권의 핵심인 체포·구속,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영장 청구시 검사 사인만 받으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수사권을 박탈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 증거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 어렵고, 공소유지도 어려워진다”며 “검사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처벌이 필요한 범죄자를 풀어주게 되거나 억울한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간 검찰이 담당해 오던 중요범죄 대응이 불가능해진다”며 “세월호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정농단 사건 등 대형 참사와 부패사건을 그동안 누가 수사해왔느냐”고 되물었다

나아가 조 검사장은 “수사·기소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도 아니고 올바른 방향도 아니다”며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조 검사장은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추진 명분으로 내걸고 일부 국민이 공감을 표시하는 ‘검찰의 자의적 수사권 행사’ ‘제식구 감싸기 행태’에 대한 반성은 내놓지 않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